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현장 확인... 유류세 인하 효과 모니터링

## 유류세 인하 현장점검

석유공사「유가 상황실」 방문... 국내외 유가 동향 점검 등

문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02-2110-5454)

- 지식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일선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 ◎ 석유공사에 설치·운영중인 「국내외 유가 상황실」에서 유류가격 동향 점검 후,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개발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음
  - ◎ 참고로, 지난 3월 10일 유류세 인하 이후 이틀 동안에 걸쳐 전국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휘발유 가격은 40원/ℓ 내외, 경유가격은 30원/ℓ 내외 하락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됨
- 李장관은 먼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현장점검하기 위해 ○○주유소등을 방문하여, 지난주 판매가격과 당일 판매 가격을 비교하고 주유소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함
-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유소가격의 하락여부에 대한 李장관 질문에 대해, 「○○ 주유소」 담당자는 3월 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였으나,
  - 주유소별 재고물량, 국제유가 지속 상승 등으로 일부에서는 소비자가격 하락이 즉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유류세 인하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국내기업의 해외확보 매장량 전년대비 2억배럴 증가한 22.5억배럴

# 2007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2%로 상승

해외유전개발투자 전년대비 34% 증가한 25.5억불로 사상 최대 기록

문의 | 지식경제부 유전개발팀(02-2110-5438)

- 산업자원부는 '07년 해외유전개발 사업 실적을 발표함
- ◎ '07년 국내기업이 생산한 원유·가스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45.7백만 배럴로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이 4.2%로 회복
- ◎ 해외유전개발을 통해 확보한 개발·생산광구의 확인매장량은 전년대비 2억 배럴 증가한 22.5억배럴 달성
- ◎ 신 고유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해외유전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어 해외유전개발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5.5억불 수준
- ◎ 또한 신규사업 참여면에서도 전년대비 79% 증가한 43건 기록 및 과거 탐사위주가 개발·생산 참여 확대 추세
- ◎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60%(26건)에 달하는 등 유전개발사업의 저변이 크게 확대 등
- ◎ 그동안 진행해온 해외유전개발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표함

# 송전선 · 철탁건설계획 확정이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5473)

■ 지식경제부는 그 동안 발전소, 철탁 등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3월 11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본 개정안은 중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후에 이를 사후에 인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바, 사업자에게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면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 한전이 자체 운영중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은 환경영향, 자연경관, 법규정, 경제성, 용지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IT기술(GIS, 항공레이저측량 등)을 적용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입지선정에 적극 참여시켜 입지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 금번 개정안은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기 전단계로서 한전 자체적으로 동 시스템 시범 적용(2008~2009, 4개의 송·변전소)하여 송선선로의 경과지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시범적용 : 345KV신청원분기송전선로, 154KV상정-영일송전선로, 345KV신시화변전소, 154KV이동변전소

◎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따르면 전원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유사 인·허가 업무의 일괄 처리로 전원개발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①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 의견청취 규정만 있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 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에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을 위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추가하고
- ③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22개 법률 37개 의제된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다시 신고토록한 조항을 통보로 개정하여 절차를 개선하였음
  - \* 첨부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 ◆ 금번 개정안은 3월 11일 입법예고 되어 20일간의 의견수렴('08. 3. 31일까지)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 ◆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집단에너지(CES) 사업」에 고압도시가스 공급 허용 도시가스사업 시행규칙 (개정·시행)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02-2110-7863)

- 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활성화 및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허용범위 상향 조정” 및 “공동주택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008년 3월 11일 개정·공포하였음.
  - ※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사업 : 건물 밀집지역의 일정 건물군을 대상으로 소형 열원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통합 생산·공급하는 선진형 집단에너지 사업
-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CES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에 따른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회사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3메가파스칼까지로 상향 조정함.
  - \*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위험시설이 인명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에 의한 인명의 피해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 전기용품안전인증, 공급증 풀어드립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련 제품안전포털사이트 운영 및  
질의·답변 사례집 배포

문의 |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4)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과 관련한 기업의 공급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05년~'07년)의 질의·답변 189건을 유형별·분야별로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여부, 안전인증 방법 등과 관련한 중요하고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관련 제조업체, 세관 및 시·도 공무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구성 :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안전인증 공통민원, 제품군별 질의·답변으로 구분

■ 이 사례집이 발간·보급됨에 따라 법제도 운영·인증시험·통관 실무담당자의 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와 관련된 대국민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제고되고,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 될 것임